

# 집 없는 청년년 갈수록 늘어

집값 비싼데 소득 제자리  
자기집 비율 2006 → 2012  
30대 40.2% → 27.1%  
20대 10.3% → 6.2%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층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집값이 워낙 비싼 탓에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갈수록 크게 떨어지는 추세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세대간·세대 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의 경우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이 지난 2006년만 해도 40.2%에 달했

지만 2012년에는 27.1%로 줄어들었다. 반면 30대의 전세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37.1%에서 40.1%로 높아졌고, 보증부 월세의 비율도 17.0%에서 26.9%로 증가했다.

20대의 자가보유 비율은 2006년 10.3%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6.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20대의 전세 비율도 29.4%에서 18.6%로 줄어 들었다. 반면 보증부 월세 비율은 42.0%에서 54.0%, 월세 비율은 14.3%에서 17.0%로 높아졌다.

이처럼 20대와 30대의 자가 보유 비율이 떨어진 것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집값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을 장만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40대 가구가 주택을 살 때 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2006년에는 8.9%였지만 2012년에는

18%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절반가량은 주택을 살 때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얻어 집을 장만하는 비율은 ▲40대 14.8% ▲30대 21.9% ▲20대 47.6%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나 친인척의 자금지원 규모가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06년 60.0%에서 2012년에는 64.8%로 증가했다.

현행속 국토연구원 토지구획연구본부장은 "자산형성에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미치는 영향은 청년층일수록 크고 이러한 자산은 이들이 자가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 본부장은 "세대 간의 자산 이전 여부에 따라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대형마트, 납품업체 상대로 '폭리'

제품군별 마진을 최고 55%  
"백화점보다도 높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달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부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을 하는 업체는 15~20%에 이르는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응답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

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업체가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등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3.7%)'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 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지원사업 공모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는 15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6억2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 추진으로 3년간 총 52개 건축물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을 최대 59%까지 달성했다.

지원사업은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 지원,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단계에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통해 총 12개 사업 내역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성주 기자

# 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전북 농관원, 4월29일까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서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업 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밭 조건 불리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29일까지 접수받는다.

그동안 각종 직불금은 지자체에서 신청받았고, 경영체 등록 변경은 농관원에서 접수받는 등 도내 농업인이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농관원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 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동접수센터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배치되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면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광영 기자



장담그기, 집에서 직접 만든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인동제비원 메주담그기 세트는 전통식품명인 제비호 최명희 명인이 제조했으며 장담그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1상자에 들어있다. 가격은 125,000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추진

전북 중진공, 2개 대학 56개 학과...신입생 900여명 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은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3자 협약을 통해 근로자가 일하면서 전문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유형은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로 나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 과정으로 운영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 후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등록금의 65%까지, 채용 조건형은 등록금 전액을 졸업 시까서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단, 졸업 후에는 최소 1년 이상 재직기업에 의무 근무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전북 2개 대학, 56개 학과로 올해에는 신입생을 약 900여명 뽑을 예정이다.

사업 참여대학과 학과 정보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in.smb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광영 기자

# 지역산업육성사업 수요조사 전북테크노파크, 19일까지 접수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수요조사를 이달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수요조사는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간 연계협력력을 통해 지역산업 기술융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분야 등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유형을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

수요조사 대상은 전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가능한 기업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btp.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전방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도내 기업과 기관들이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해 7월 전북 이진 공공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스마트팜 기반 조성 활성화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신광영 기자

# 신보, 350억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신사업 개척 등 미래성장성이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선정, 해당기업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가 인수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신보는 2014년 27개 기업에 240억원, 2015년 30개 기업에 250억원을 투자했고, 이중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에 총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에 적극 지원했다.

또한 2014년 이후 신보가 투자한 57개 기업 중 15개 기업에 창업투자조합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385억원 규모의 후행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업들이 신보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132억원의 2.7배가 넘는 후행투자를 유치해 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신 보증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민간투자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동투자를 추진해 민간 투자시장 내 시장실태영역에 대해 보완형 여정이다. /정영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http://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mailto:jivs@hanmail.net)